

인터뷰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Interview

“현장 의견 적극 수렴…농민과 호흡하는 농지은행 구현”

각종 제도 개선 정책
진입장벽 낮춰고령 농업인·전업농
대상 영역 확대대국민 우량 서비스
공공기관 탈바꿈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2024년 1월 1일 농지은행처장에 부임했다. 그동안 청년 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편의·접근성까지 확보하면서 농민과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농지은행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촌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면서 농지은행의 각종 사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 고령농업인, 대국민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3축 경영’에 시동을 건 농지은행. 한국농업신문이 하태선 농지은행 처장을 서면 인터뷰했다.

하 처장 부임 후 농지은행은 농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농지은행은 청년 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영역을 발전시켜 왔는데 수시로 개최되는 농업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정책에 녹이는 현장 3축 경영이 올해 농지은행 사업의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농지은행은 청년 세대 유



입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올해 농어촌공사의 전략사업으로 꼽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배수불량 논 등 훼손된 농지 복구사업을 통해 우량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처장은 “올해는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면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로의 영역 확장도 주목할만 하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 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춰 농지은행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고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바뀌는 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농업인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임대사업, 초기 자본 부족으로 농지 매입이 힘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집단화된 스마트 농업용 농지를 지원하는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등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는 사업은 청년지원 사업을 제외한 3가지.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농지의 효율적인 집단

화다.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농지매매사업과 임대임대사업도 두 가지를 개선했다.

그동안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최대 지원한도를 제한해 왔다. 가령 진입단계는 3ha, 성장단계는 6ha, 전업단계는 10ha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번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규제 혁파는 전업 단계의 폭을 완화해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처장은 “호당 경지면적 감소는 농업인의 농촌 이탈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농업인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면서 “전업단계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전업농 지원을 두텁게 보장하면서 농촌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 주요 개선안에 대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 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은행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농지 규모를 디자인하고 나아가 농가 소득에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다.

작은 규제 완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하 처장은 “농지은행은 전업농의 농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농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어촌공사, 나아가 대국민 양질의 서비스 공공기관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욱 기자 farmwook@newsfarm.co.kr